

「기록관리 업무협의회 구성안」 관련 지자체교육청 의견서 분석 결과

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록관리 업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
 관련해 지자체·교육청 기록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서 분석 결과임

□ 조사 개요

- 목적: 국가기록원과 지자체·교육청 간 소통 채널 마련 및 협업체계 구축
- 일시: '19. 3. 20. 14:30 ~ 17:00('19년 기록물 관리지침 교육 실무협의회 중)
- 대상: 지침교육 참석자 279명(지자체 120기관 128명, 교육청 146기관 151명)
- 응답: 기록관리 담당자 104명(지자체 39명, 교육청 65명)

□ 조사 내용 및 결과

○ 조사 내용

- 협의회 구성 주체에 대한 사항(기록관 자발적 구성/기록원 주도 구성)
- 기관유형별 협의회 운영 여부(찬성/반대/기타)
- 기타 제안할 사항

○ 의견 수렴 결과(요약)

- 협의회 구성은 국가기록원 주도로 구성하기를 희망(54%)*
 - * 응답자 중 광역 6/5명, 기초 33/21명, 교육청 15/8명, 지원청 50/22명
- 지자체(광역/기초), 교육청(교육청/지원청) 기관유형별 협의회 운영 희망(96%)*
 - * 응답자 중 광역 6/5명, 기초 33/31명, 교육청 15/15명, 지원청 50/49명 찬성

응답자 소속 기관		Q. 구성 주체에 대한 의견		Q. 기관유형별 협의회 운영		
		기록관 자발적 구성	국가기록원 주도 구성	찬성	반대	기타
지자체(광역)	6	1	5	5	1	-
지자체(기초)	33	12	21	31	2	-
교육청(본청)	15	7	8	15	-	-
교육청(지원청)	50	28	22	49	-	1
계	104	48	56	100	3	1

□ 시사점

- 협의회 구성 관련 지자체(광역시/기초)와 교육청은 국가기록원 주도로 구성, 교육지원청은 상대적으로 자율적 구성을 희망
- 협의회 운영 관련 공문 발송 등 참여 지원 및 국가기록원 간부(원장·과장), 업무 관련 부서 담당자 참석 요청
-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식
 - (기본방향) 지자체와 교육청 분리 구성 추진
 - (지자체) 광역시, 도-시군구 단위로 협의회 구성
 - (교육청) 기 운영 중인 시·도교육청협의회와 협의 후 방향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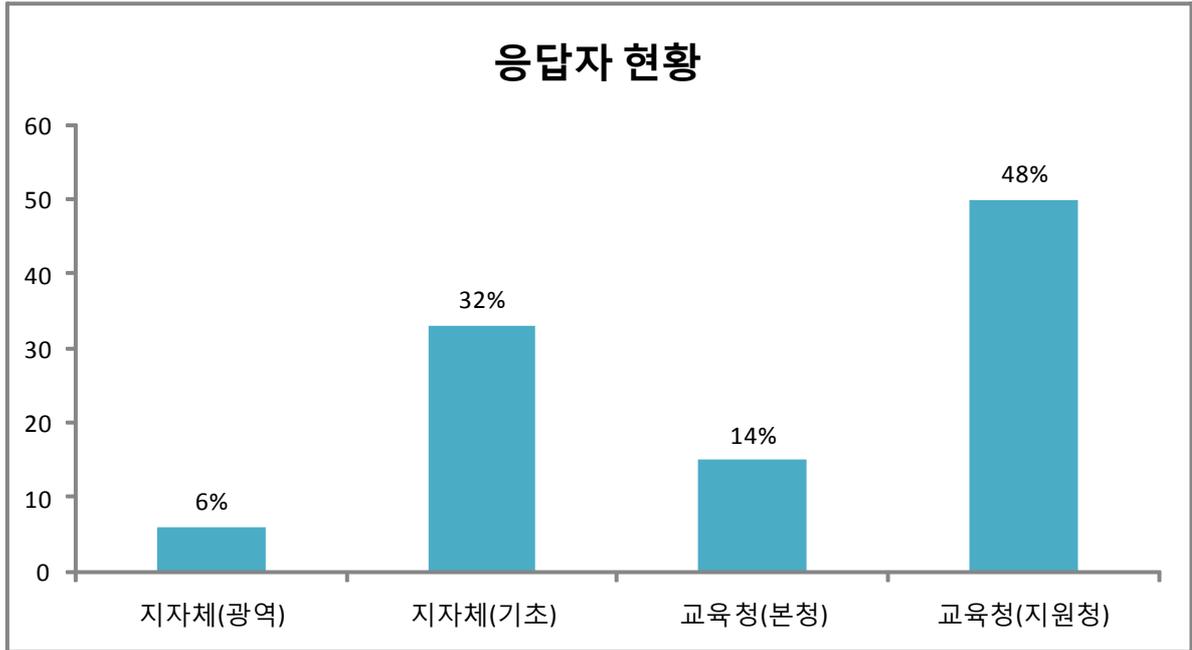
□ 기타 제안 사항[요약]

- 지자체 주요 제안사항
 - 정부합동감사에서 기록관리 분야 감사현장에 맞게 조정 필요
 -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기록관 설치 예산·조직 지원
 - 증가하는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및 부서 신설 필요
 - 전문요원 인력 증원 및 기록관리 이외 업무 조정 등 처우개선
 - 단위과제 보존기간 표준 또는 준칙 제정 필요
 - 문서보존포맷 변환과 장기보존포맷 변환 주기(1년) 조정
- 교육청 주요 제안사항
 - 전문요원 배치 및 관할 처리과 현황 감안, 법 개정을 통한 권역별 통합기록관 설치 운영 요청
 - 기록연구사 증원 및 기록관리 업무 전담을 위한 사무분장 개선 필요
 - 다양한 생산시스템에 대한 기록원 차원의 규격, 연동성 등 조정
 - 교육지원청 RMS 유지관리 업체의 역량 부족, 기록원 차원의 공공기관 RMS 유지관리 일괄 계약 희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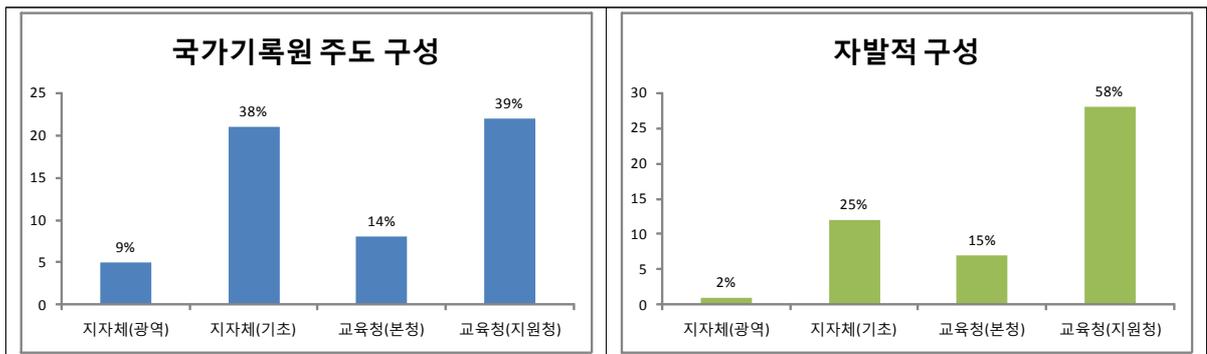
※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추후별도 공지 예정

□ 조사 항목별 세부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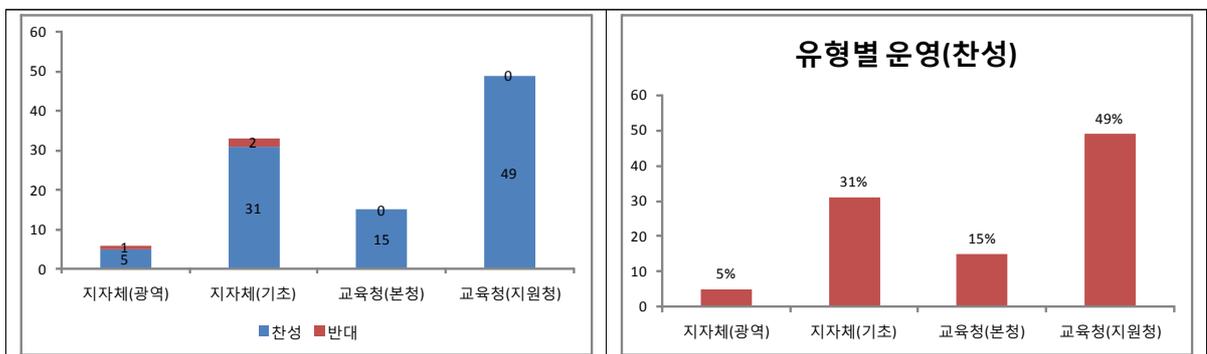
- 지자체 · 교육청 기록관리 담당자 274명 중 104명 응답(응답률 37.2%)
 - 광역단체(6명), 기초단체(33명), 시도교육청(15명), 교육지원청(50명)



- 구성 주체에 대한 사항(국가기록원 주도 구성: 53.8%)



- 기관 유형별 협의회 운영 여부에 대한 의견(유형별 운영 찬성: 96.1%)



붙임

기타 제안 사항(종합)

구분	제안 내용	기관
기록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	○ 국가기록원에서 협의회 주관 기관을 지정(권고)하여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	시도 지자체
	○ 지자체 기록연구사들이 자주 교류 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공식적인 자리 마련 필요	기초 지자체
	○ 적극적인 협의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이 각급 기관(기관장, 부서장)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개선 등 기록원 차원의 노력 당부	
	○ 협의회를 국가기록원 주도 구성 후에는 자율운영(기초지자체 시군구 단위 유형별 협의회 운영) 될 수 있도록 지원	
	○ 기초지자체 협의회 구성시 크게 분류하지 말고(남부권, 중부권 등) 좀 더 세세하게 분류를 정해 협의회를 구성해 주기 바람	시도 교육청
	○ 협의회 개최시 장소 협조 및 국가기록원 업무담당자 참석 등 지원	
	○ 현재 시도교육청 협의회는 자발적 구성·운영으로 교육지원청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음 - 국가기록원에서 주도하여 정식 공문 발송 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	교육 지원청
	○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 결과 공유	
	○ 각 기록관 운영 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발적 구성은 어려워 보임 - 향후 협의회에서 '통합기록관 관리' 부분과 법령 개정에 관한 내용, 기관 중요기록물의 기록화에 대한 방법 등 논의 희망	교육 지원청
	○ 협의회 운영시 각 기관별로 논의 안건 필수 제시 및 의무 참석이 될 수 있도록 강제 조항 필요 - 협의회에서 논의사항은 각급 기록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공개 필요 - 업무협회의의 개최시 국가기록원 내 유관 부서 및 관련 업무 담당자도 참석 대상에 포함 필요	
○ 협의회 구성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, 단순 친목 또는 교류 목적의 협의회는 불필요		
○ 기 구성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를 통해 현재처럼 의견수렴 진행		

구분	제안 내용	기관
기록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급 기록관 자발적 구성 및 기관 유형별 협의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현장 적응력 높은 협의 결과의 도출이 용의하다고 판단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앙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의 지원이 필요하며, 이에 대한 절차적 장치가 필요 	교 육 지원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협의회 구성 및 이에 대한 과정의 의견조회가 협의회 구성원 뿐 아니라 각급 기관 기록연구사들에게도 지속적인 안내 필요 (절차 및 회의 내용 공유)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를 진행할 때 생기는 반복적 문의 사항이나 기관 간 업무처리방식을 협의회를 통해 공유하고, 가능하다면 유사기관 간 공통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민원 및 기관 직원 대응시 원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	
조직·인력 업무분장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한 규정(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) 관련 공문처리를 기록연구직 업무로 배정하는 등 기록관리 고유 업무 외 행정업무 분장의 조정 및 개선 희망 	기초단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기록원이 각급 기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인사 배치에 관여하지 못하더라도 배치인력의 처우개선, 인력 증원 등을 촉구 하는 노력(공문 시행) 요망 	
업무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록관리가 전자기록물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해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현장의 기록연구사들이 전자기록물(시스템)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. 전담 인력 및 전담 부서 신설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별 전문요원 배치 규정으로 인해 기관에서 전문요원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 있음. 지원청의 경우는 관할대상 처리과 수가 천차만별이라 권역별 운영, 통합기록관의 운영이 필요하지만 법 규정이 묶여 있어서 현실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처리과 수를 감안한 기관별 유연한 전문요원 배치 내용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 - 전문요원 배치 의무화가 '11년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미배치된 기관은 향후에도 배치할 계획이 없을 것이며, 처리과가 20~30개 이내인 상황에서 인원배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배치된 기록연구사가 기록물 외 별도의 행정업무를 추가 분장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	교 육 지원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록관리 담당자 사무분장 현황을 파악하여 조정·개선 요망 	

구분	제안 내용	기관
업무관리 및 기록관리 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(지원)청의 RMS 유지보수업체의 노하우 및 기술력 부족으로 RMS를 통한 전자 이관시 에러 등 어려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기록원 차원의 공공기관 RMS 유지보수업체 일괄 계약 요청 ○ 교육(지원)청도 국가기관과 같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동일 구축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부·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에러가 종종 발생 	교육 지원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기관마다 다양한 생산시스템 운영 중 국가기록원에서 표준 규격·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규제 필요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기록원이 상호 연동의 문제점 등을 사전협의 하는 구심점 역할 필요 	교육 지원청
기록관리 기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위과제 보존기간 표준 또는 준칙 제정 필요 	광역시도
문서보존 포맷 변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록관에 이관된 보존기간 10년 이상의 기록물에 대한 문서보존포맷 변환과 장기보존포맷 변환 시점(1년 이내) 여유 있게 조정 필요 	
합동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합동감사에서 기록관리 분야가 감사현장에 맞게 적절한 조정 작업을 거쳐 줄여주기 바람 	기초단체
재정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비롯한 기록관 설립에 필요한 재정 지원 요청 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자료를 공유해서 충분한 의견정리 시간을 주기 바람 	시도 교육청